

이호근, 유명무실한 위원회 개선 촉구

한 차례도 회의 열지 않은 위원회 17개... 214개 중 96개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하 법률 위반

이호근 의원(고창 제1선거구)은 13일 전라북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도민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를 비롯 3개 위원회는 2016년부터 회의가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전라북도교육과정 위원회 등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015년 6개 위원회, 2016년 9개 위원회, 2017년 1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개선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214개 위원회(도-135개, 도교육청-79개) 중 여성비율이 40% 이하로 구성된 위원회가 96개(도-40개, 도교육청-56개)나 되어 「양성평등기본법」과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북도는 태권도공민민자치위원회를 비롯 (5개위원회), 전라북도교육



이호근 의원



“함께 건배” 중국을 국민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소피텔호텔에서 열린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 참석해 배우 추지현과 남편인 우효광 씨와 건배를 하고 있다.

청은 건물개축심의위원회를 포함 (8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근 의원은 양성평등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양용호, 도 해양산업 업무 조직체계 재정비 제안

전라북도 해양산업 관련 업무가 3개 부서로 분담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국민의당 양용호 원내대표(군산2)는 13일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는 해양산업 관련 업무를 농축수산물부, 건설교통국, 새만금추진지원단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원내대표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올 8월에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5년까지 총 31개의 핵심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라북도 행정조직은 이원화되어 있는데다가 오히려 축소되어 정책과 실행자가 나뉘고 있는 형국이며, 업무 일관성이 없어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 원내대표는 “전남, 충남, 경남, 제주도 등 대다수 해안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해양수산국을 설치해 해양수산 분야를 비롯해 해양항만에 이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전라북도처럼 해양수산 업무와 해양항만 업무를 별도 부서에서 분담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도내 해양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 3개 부서로 분산된 해양산업 관련 업무를 반드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해양관광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업무는 농축수산물부 해양수산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항만물류산업은 건설교통국 항만공항안전과와 교통물류도로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개발지역의 해양산업 업무는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양용호 의원

김종철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획기적 대책 필요”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국민의당, 전주7)은 13일 열린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말 기준, 전라북도 인구는 185만4,688명으로 전년말 대비 1만103명이 줄어, 전국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인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통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고용, 주택, 교육, 보육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이 중앙정부 위주의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의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저가의 임대주택 공급을 현재의 2배~3배로 늘리고 다중이 가족에게는 20~30평형대 임대아파트를 15년~20년 무상임대하는 과격적인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종철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전라북도가 충분히 고려해볼 문제라며 주택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육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심도 있는 과감하고 장기적인 예산투자”를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김종철 의원

도 농산경제위, 중국 청도 방문 수출지원·판로개척 활동 전개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는 17일~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청도(산둥성 칭따오)를 방문, 대중국 수출지원 및 판로 개척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에서는 한중 교류 재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출장을 실시하게 됐다. 농산경제위원회는 청도 현지 수입유통업체인 청도해지촌내집식품유한공사를 방문하여 전북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 상담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특히 (재)자연가에서 생산되는 사과자와 황토 마을에서 생산한 고구마 말랭이 등 마을 상품으로 집중 수출 세일즈 마케팅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전북 출신 기업인으로서 중국 현지에 진출한 수원정밀 유한공사 및 성해원복장 유한공사를 방문하여 이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전북도 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최인정 의원, “전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지켜내야”

도의 적극적 노력 당부... “서남대 의대 존치 어렵다면, 군산대에서도 의대 유치해야”

전북지역 의대 정원 관리 강화를 위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인정 의원은 “도에 이미 확보된 의과대학 정원을 지키지 못하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지역의 의과대학 정원을 지키기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목소리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13일 제348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동부권 유일 의과대학으로 의미가 남다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존치시키기 위해 전



최인정 의원

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보다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 서남대학교의 존치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그럼에도 만약 폐지가 강행된다면, 전북에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은 당연히 도내에서 재배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발언은 이를 위해 전북지역 의과대학 정원을 지켜내고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균형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의료보장인구 10만명 당 주요 암환자가 많은 시도 TOP5 자료분석 결과, 17개 시도 중 전북은 위업에서 1위, 폐암 2위, 간암 5위, 대장암 5위로 암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남대가 폐교로 인해 의과대학도 폐교되는데 이 정원을 노리는 전남과 경남 등 지역이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하염없이 군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아무리 지역간 무한경쟁 시대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상처와 아픔을 자기 지역 이익에 이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하나라도 서남대 의과대학의 존치가 어렵다면, 국립 군산대학교에라도 의과대학을 유치, 전북이 가진 의대 정원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